논 문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8권 3호 2025 (67~79)
http://dx.doi.org/10.21189/JKUGS.28.3.5

공공투자로 본 일본 국토정책의 기조 전환*

다무라 후미노리**

The Transformation of Japan's National Land Policy Viewed Through Public Investment*

Fuminori Tamura**

요약: 본 연구는 1960년대 이후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 국토정책의 기조가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규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성적 분석에 편중되어 있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1962년~2019년의 도도부현별 행정투자 실적을 바탕으로 공공투자액의 IPA지수를 산출하여 공공투자 전체와 7개 사업 부문의 시공간적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일본 국토정책의 기조 전환을 검토하였다. 분석의 결과, 1990년대까지는 토건국가에 의거한 국토균형발전 지향의 일본식 공간적 케인스주의가 지배적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도쿄도에 대한 공공투자의 공간적 선택성이 뚜렷이 강화되면서 도시 입지 정책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공간전략이 전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농림수산, 국토기반, 육상 교통기반 사업 등에서는 지방권 지향 및 기반 정비형 공공투자가 지속되어, 일본 국토정책의 기조 전환은 토건국가에 의거한 일본식 공간적 케인스주의의 완전한 방기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공간전략과의 중첩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일본의 국토정책, 공간적 케인스주의, 신자유주의적 공간전략, 도시 입지 정책, IPA지수.

Abstract: This study assesses whether Japan's national land policy has moved from construction state–based spatial Keynesianism aimed at balanced development to a neoliberal spatial strategy that selectively supports globally competitive urban regions. Using administrative investment reports for Japan's 47 prefectures (1962–2019), we construct an IPA index and analyze spatio-temporal patterns for total public investment and seven project categories. The results indicate that from the 1960s through the 1990s Japan practiced a Japanese-style spatial Keynesianism that redistributed resources to mitigate regional disparities. Since the 2000s, however, Tokyo's IPA index has risen sharply while other prefectures have converged toward the national average, signaling stronger spatial selectivity consistent with an urban locational policy. Meanwhile, investment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national land infrastructure, and land transport continues to show rural-oriented and basic-infrastructure features. Overall, Japan's shift reflects not a full abandonment of spatial Keynesianism, but an overlap between balanced-development investment and a selective neoliberal strategy focused on specific urban regions.

Key Words: Japan's national land policy, spatial Keynesianism, Neoliberal spatial strategy, urban locational policy, IPA index.

1. 서론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도시와 지역이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주체로 부상하였는데, 도시와 지역이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정책 틀이나 제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cott, 2008).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서양 국가들은 공간적 케인스주

* 본 연구는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Research Fellow, SNUAC Northeast Asia Center, fumi@snu.ac.kr)

www.kci.go.kr

의라고 불리는 정책기조 아래 국토공간을 단일 스케일로 간주하고 균등 발전을 도모하는 공간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1980년대에 글로벌화가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낸 이후 국경을 초월한 자본 활동이 확대되면서 공간적 케인스주의는 위기에 노출되었다. 케인스주의 복지국가들은 이러한 축적의 위기를 수정하기 위하여 국가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주체로서의 글로벌한 경쟁력을 지닌 도시와 지역에 대하여 정책을 선택적으로 집중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공간전략을 채용하였다(Brenner, 2004). 즉 국토정책의 전개가 특정 도시나 지역에 대한 공간적 선택성(spatial selectivity)을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서구의 케인스주의 복지국가들이 1970년대에 축적의 위기에 빠진 것처럼, 일본도 1990년대 초에 버블경제의 붕괴라는 위기를 맞이하였다. 당시 일본은 공공사업과 감세를 조합시킨 재분배 정책을 통하여 불충분한 사회보장을 보충하고 균등 발전을 도모하는 토건국가(ジェラルド·カーティス·石川真澄, 1983; 永廣顯, 2014)를 정책기조로 삼아 국토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토건국가는 일본식의 공간적 케인스주의(中澤秀雄, 2019, 273)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서구의 케인스주의 복지국가와 마찬가지로 자본축적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구의 케인스주의 복지국가처럼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국토정책 기조도 토건국가에 의거한 국토균형발전을 포기하고 도시와 지역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간주하는 신자유주의적 공간전략으로 전환되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러한 주장들의 대부분은 정책사나 제도사 분석을 통한 정성적 연구에 여전히 국한되어 있다. 즉 일본 국토정책의 기조 전환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량적 분석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유형의 실증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1960년대 이후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 국토정책의 기조가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규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양의 케인스주의 복지국가들의 국토정책기조가 공간적 케인스주의로부터 신자유주의적 공간전략으로 전환된 것처럼, 과연 일본의 국토정책 역시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경험하였는가?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국토정책의 수행결과인 공공투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국토정책의 기조 전환이 발생한 시기 및 국토정책의 특정 도시·지역에 대한 공간적 선택성의 유무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1) 국토정책의 기능과 국토정책 수행 결과로서의 공공투자

Scott가 지적한 것처럼 글로벌한 경쟁 구도 아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도시와 지역의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Scott, 2008). 국토정책은 이러한 정책적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정책영역 가운데 하나이다. OECD(2025)에 따르면 국토정책이나 국토계획은 토지이용을 조율하고 사회적·경제적 복지를 최적화하는 수단으로 향후의 활동과 공공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더 구체적으로 국토정책은 공공투자의 지역별 배분, 균등발전을 위한 투자와 공간 선택적 투자 사이의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선택 구조를 가시화시킨다(Tsukamoto, 2012).

일본에서도 국토정책은 공공투자의 지역별 배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하였다(矢田俊文, 1995, 1996, 1999; 山﨑朗, 1998). 공공투자는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국토정책 및 그 근간을 이루는 국토계획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요한 수단으로 동원된다(森裕之, 1997). 이러한 공공투자는 국토정책이 공간상에서 수행된 결과이자, 국토정책의 공간적 선택성의 결과로 정의할 수 있다.

2) 서구 국가의 정책기조 전환과 국토정책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약 사반세기 동안 포디즘의 전성기로 평가받는 시기가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전개했는데 이를 뒷받침한 것이 케인스주의 정책이었다. 케인스주의에 의거한 케인스주의 복지국가는 정부의 통제 아래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을 비롯하여 완전고용과 최저임금, 안전한 노동환경,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이전 등을 보장하는 여러 제도를 포괄한 국가를 의미한다(Knox and Pinch, 2010, 24-25). 1930년대 이후 이러한 대열에 영국이나 미국, 스웨덴 등의 국가들이 합류하기 시작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케인스주의 복지국가는 선진 공업국가들의 주된 경제 규제 모델(model of economic regulation)로 자리를 잡았다(Martin and Sunley, 1997, 868).

케인스주의 복지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토의 불균등 발전을 시정하기 위하여 공간적 케인스주의(spatial keynesianism)를 국토정책의 기조로 삼았다(Martin and Sunley, 1997; 丸山真央, 2012). 공간적 케인스주의는

www.kci.go.kr

국민경제의 공간적 불균등 발전 완화와 경제성장을 위하여 국가가 채용한 일련의 제도들과 조정전략이다(中澤高志, 2020, 69). 공간적 케인스주의 아래 추진되는 국토정책을 통하여 서구의 케인스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복지와 공공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산업 입지의 조합으로 각 지역의 생활수준 및 고용기회 균등화가 도모되었다(Brenner, 2004, 2019).

그러나 글로벌화의 확대와 함께 자본 활동이 점차 국민국가라는 지리적 스케일을 초월하게 된 결과, 국가는 기존의 스케일적 접근만으로는 그 의도대로 자본축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국토공간이라는 무대에서 균등 발전을 지향하는 공간적 케인스주의가 위기에 직면하자, 케인스주의 복지국가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주체를 기존의 국가로부터 도시 및 지역으로 전환시켰고, 한계에 부딪힌 공간적 케인스주의 대신 신자유주의적 공간전략을 채용하였다(Brenner, 2003, 2004; Swyngedouw, 1997).

신자유주의적 공간전략은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 스케일의 경제성장을 상정했던 기존의 공간적 케인스주의와는 달리, 도시와 지역에 핵심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Brenner는 이러한 국가 경제성장을 위한 국토공간의 스케일 재편을 설명하기 위하여 '국가 리스케일링(state rescaling)'을 제시하였다. Brenner는 국가 내에서, 그리고 국가를 통하여 작동하는 사회세력들의 사회-공간적 상호작용에 따라 국토공간이 사회적으로 구성됨과 동시에,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재편되는 것으로 보았다(Brenner, 2004). 특히 자본축적과 위기 형성의 연속적 순환에 따라 국토공간이 스케일 편성의 변화를 경험할 때 국가공간전략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스케일을 재편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국가 리스케일링의 특징으로 보았다(Brenner, 2019).

국가 리스케일링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공간적 스케일이 국가로부터 도시 및 지역으로 재편된 결과, 서구 국가들은 글로벌한 경쟁력을 지닌 특정 도시나 지역에 공공투자나 맞춤형 정책을 집중시키는 전략을 취하게 되었다. Brenner는 이처럼 글로벌한 경쟁력을 지닌 특정 도시나 지역에 공공투자나 맞춤형 정책을 집중시키는 공간정책으로 '도시 입지 정책(urban locational policy)'을 제시하였다. 즉 1970년대 이후 서구 국가들의 국토정책은 공간적 케인스주의로부터 도시 입지 정책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공간전략으로 명확하게 전환되었다(Brenner, 2004, 2019).

3) 일본의 정책기조 전환과 국토정책

한편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관찰된 국토정책의 기조 전환, 즉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로의 전환이 일본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비판적 지리학자나 도시연구자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 신자유주의가 대두하기 시작했다.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너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1982년부터 1987년에 걸쳐 내각을 조직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정권에 의하여 공기업 민영화나 규제완화 등의 방식으로 도입되었다(大田英明, 2021; 山﨑孝史, 2013). 이어서 2001년부터 2006년에 걸쳐 집권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는 "성역이 없는 구조개혁(聖域なき構造改革)"이라는 구호 아래 제2의 신자유주의기를 펼쳤다. 우편사업이나 도로 관련 공단, 행정 서비스 부문의 민영화 등으로 대표되는 공공영역의 민간으로의 이양과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가 일본에서도 선명하게 나타났다(大田英明, 2021).

이러한 맥락에 따라 서구의 케인스주의 복지국가처럼 일본의 국토정책 역시 정책기조가 신자유주의로 전환되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었다(川上征雄, 2023; 小田清, 2007; 瀬田史彦, 2021; 中澤秀雄, 2019). 국가 리스케일링의 관점에서 일본 수도권의 도시정책을 고찰한 도시연구자인 사이토 아사토(齊藤麻人)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도시 도쿄의 지위가 위협을 받게 되자, 일본정부는 이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신자유주의적 국토정책들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국토정책들은 주로 도쿄 중심부에 특정 경제기능을 집중시키고 이를 뒷받침하는 거주 및 소비 환경 정비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스케일적 과정을 Brenner가 제시한 도시 입지 정책의 표출로 해석하였다(齊藤麻人, 2014). 또한 우에노 준코(上野淳子) 역시 고이즈미 구조개혁에 따른 국가 스케일의 재분배 기능 축소, 도쿄에 대한 맞춤형 정책의 적용과 공공투자의 도쿄에 대한 선택적 집중 등을 거론하면서 일본 국토정책기조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주장하였다(上野淳子, 2010).

그러나 이처럼 일본 국토정책의 기조 전환을 논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정책사나 제도사 분석을 통한 정성적 접근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주로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띤 정책들의 도쿄에 대한 공간 선택적 적용에 초점을 두며, 제도적으로는 도쿄와 동일한 정책이 적용될 수 있는 도쿄 이외의 도시나 지역들을 분석 대상에서 제

www.kci.go.kr

외되었기 때문에 관계론적 차원에서의 한계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Brenner가 제시한 것처럼 신자유주의적 공간전략으로서의 도시 입지 정책의 특징은 특정 도시나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정책과 함께 공공투자의 공간 선택적 투입에 있다. 우에노 준코(上野淳子, 2010)는 정책기조 전환을 도출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적 국토정책의 주요 수단인 도시 입지 정책을 통하여 나타나는 공공투자의 변화에 주목하여 공공투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도쿄 이외의 지역과 비교하여 도쿄에 대한 공공투자의 공간적 선택성이 강하게 나타나 있음을 주장하였다. 다만 우에노 준코의 연구도 도쿄보다 높은 비율의 공공투자를 차지한 홋카이도(北海道)에 대하여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 도쿄를 제외한 기타 지역들과 도쿄와의 관계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 분석의 대상 기간이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짧은 기간에 제한되어 있어 장기적인 경향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한계로 제시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국토정책기조 전환에 관한 연구는 사례 자체도 제한적이지만, 분석방법의 정책사적, 제도사적 접근에 대한 편중이나 데이터 활용상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의 국토정책기조 전환을 논한 기존 연구의 성과를 검증하는 차원에서도 일본의 공공투자에 대한 시공간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정성적 연구에 의하여 제시된 것처럼 일본 국토정책이 신자유주의로의 기조 전환을 경험하였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채용한다.

3.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앞서 검토한 것처럼 일본의 공공투자가 국토정책 수행의 결과라는 관점에 입각하고, 공공투자가 국토공간상에서 전개된 양상을 통하여 일본 국토정책의 기조 전환을 포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공공투자액을 지수화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활용하는 공공투자 데이터는 일본 총무성이 매년도 공표하는 도도부현(都道府県)별 행정투자 실적보고서(行政投資実績報告書)를 통하여 수집한 196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행정투자 실적액이다.

일본의 행정투자는 1960년에 책정된 국민소득배증계획(国民所得倍増計画)에서 처음으로 공적으로 사용된 개념이다(小泉允圀, 1978, 139). 국가예산으로 수행된 공공투자 및 지방공공단체의 단독사업 투자 등을 포함하며, 공적 부문에 의하여 수행된 공공투자(内閣府政策統括官, 2002, 5)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체에 의하여 수행된 도로나 주택, 공업단지, 문화교육시설 등 사회자본 정비에 대한 투자로서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용지비 및 보상비 등 포함), 시설의 유지보수비(사업비 지출과 관련된 인건비, 여비, 운영비 등), 시설 정비를 위한 계획조사비가 포함된 개념이며, 대체적으로 국민총지출의 공적총자본형성(公的総資本形成)에 해당한다(日本政策投資銀行, 2007).[1)]

행정투자 실적액의 기초자료는 행정투자실적 총액과 대체적으로 행정투자 실적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하위 17개 사업[2)]으로 구성된 일반사업, 그 이외에는 공영기업 등 여섯 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투자실적 총액과 행정투자실적의 핵심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반사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17개 하위사업으로 구성된 일반사업은 하위사업의 속성에 따라 국토기반, 농림수산, 육상 교통기반, 광역 교통기반, 도시기능, 후생복지, 문화교육시설이라는 7개 사업으로 통합적으로 재분류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2) 분석방법

다만 이러한 행정투자실적의 절대액을 그대로 분석에 활용할 경우, 우에노 준코(上野淳子, 2010)의 연구를 통하여 드러난 것처럼 면적이 넓은 홋카이도나 인구 집중이 진행된 도쿄도 등 대도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또한 이러한 한계를 회피하기 위하여 도도부현별 공공투자액을 도도부현별 면적이나 인구로 보정하여 단위 면적당 및 단위 인구당 공공투자액을 활용하였을 경우에도, 인구밀도가 높고 면적이 좁은 도쿄도나 오사카부 등 도도부현에서 단위 면적당 공공투자액이 높게 나타나며, 인구밀도가 낮고 면적이 넓은 홋카이도와 같은 도도부현에서 단위 인구당 공공투자액이 높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분석상의 한계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나카노 히데오(中野英夫, 1999) 및 니와 다카노리(丹羽崇哲, 2008)를 참고하여 연도별 도도부현별 행정투자액을 도도부현별 인구 및 면적으로 보정한 다음, 보정한 값을 전국 평균이 1.00이 되도록 조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산출된 지수를 편의상

www.kci.go.kr

IPA지수로 지칭한다.[3] 즉 일본의 광역지자체인 47개 도도부현별로 연도별[4], 7개 사업별 및 사업 전체의 IPA지수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일본 국토정책의 기조 전환 유무를 규명하고자 한다.

4. IPA지수의 변화로 본 일본 국토정책 기조의 전환

일본 행정투자의 일반사업을 구성하는 17개 사업을 통합적으로 재분류한 7개 사업의 IPA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방권 지향 공공투자, 다극형에서 일극형으로 변화한 공공투자, 기반 정비형 공공투자라는 세 가지 유형이 드러났다. 여기서는 공공투자 전체 및 세 가지 유형별로 IPA지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일본 국토정책의 기조 전환 및 이로 인하여 드러난 공간적 선택성의 변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도쿄도 중심의 공간적 선택성 강화라는 신자유주의적 공간전략의 전개와 지방권 지향 공공투자의 지속이라는 공간적 케인스주의의 병존이 사업별 분포의 차이로서 어떻게 관찰되는지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IPA지수의 변화는 국토정책 기조가 단일한 원리로 전환되었다기보다, 사업 성격에 따라 상이한 배분 원리가 병렬적으로 작동하는 중첩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전제로 해석한다.

1) 전체 공공투자의 시공간적 특성

일본정부가 수행한 공공투자 전체의 IPA지수를 보면 그 특성상 1962년부터 1990년대까지의 시기(전반기)와 2000년대 초반 이후 시기(후반기)로 구분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전반기에는 국토균형발전 목표하 격차 축소를 도모한 분산적 배분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동한 반면, 후반기에는 특정 도시 및 지역(특히 도쿄도)에 대한 선택적 집중이 강화된 양상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국토정책기조 변화의 실증적 징후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 최초의 국토계획으로, 국토균형발전 지향의 국토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제1차 전국총합개발계획(全国総合開発計画, 전총계획)이 책정된 지 3년이 지난 1965년에는 도쿄도(東京都) 및 도쿄도와 함께 수도권을 구성하는 가나가와현(神奈川県), 간사이(関西) 지방의 중심지인 오사카부(大阪府) 및 오사카부와 인접되어 있는 효고현(兵庫県)이나 와카야마현(和歌山県), 주부(中部) 지방의 중심지인 아이치현(愛知県)의 IPA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도쿄도는 3.64, 오사카부는 3.01의 IPA지수를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치의 3배가 넘는 수준의 공공투자가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 한편 이러한 지역을 제외하고 혼슈(本州)의 대부분이나 규슈(九州) 지방, 시코쿠(四国) 지방에서는 전국 평균을 밑도는 0.50~0.80 수준의 IPA지수를 기록하였다.

다만 이러한 IPA지수의 지역 간 격차는 196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 초에 걸쳐 축소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가장 높은 IPA지수를 보였던 도쿄도는 지속적인 축소 경향을 보였으며, 1979년에는 2.17로 축소하였다. 오사카부의 경우도 1981년에 1.65까지 하락하였다. 또한 아이치현의 IPA지수 역시 1965년에 1.54를 기록한 이후 축소세로 돌아서면서 1981년에는 전국 평균과 근접한 1.07까지 축소하였다. 한편 기존에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지방권을 중심으로 IPA지수가 상승한 결과 기존에 상대적으로 높은 IPA지수를 기록하였던 지역과의 격차가 축소되었다. 1965년에는 1.00 미만의 값을 보인 31개 도도부현 중 0.75 이상 1.00 미만을 기록한 도도부현은 17개, 0.50 이상 0.75 미만은 12개, 0.50 미만도 2개 존재했으나, 1980년에는 0.75 이상 1.00 미만이 24개, 0.50 이상 0.75 미만은 6개, 0.50 미만을 기록한 도도부현이 없어지면서 지방에 위치한 도도부현의 IPA지수가 전국 평균치로 수렴되어 가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IPA지수의 지역 간 격차 축소는 1962년의 제1차 전총계획 책정 이후 제4차 전총계획(1987년~1998년)에 걸쳐 일본의 국토정책이 국토라는 공간적 스케일에서 균형발전을 추진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나카자와 히데오(中澤秀雄, 2019: 273)에 의한 일본식 공간적 케인스주의의 실천이라는 평가와도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이처럼 IPA지수를 통하여 관찰된 균형발전 지향의 국토정책기조는 2000년대에 들어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98년에 책정된 제5차 전총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0년대 초반 이후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쿄도의 IPA지수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게 되었으며, 기존에 상대적으로 높은 IPA지수를 기록하였던 오사카부나 아이치현과 같은 지역들의 IPA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도쿄도를 제외한 지역들이 수렴되어 가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2000년대 중엽 이후 도쿄도의 IPA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2019년에는 1960년대와 동등한 수준인 3.28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글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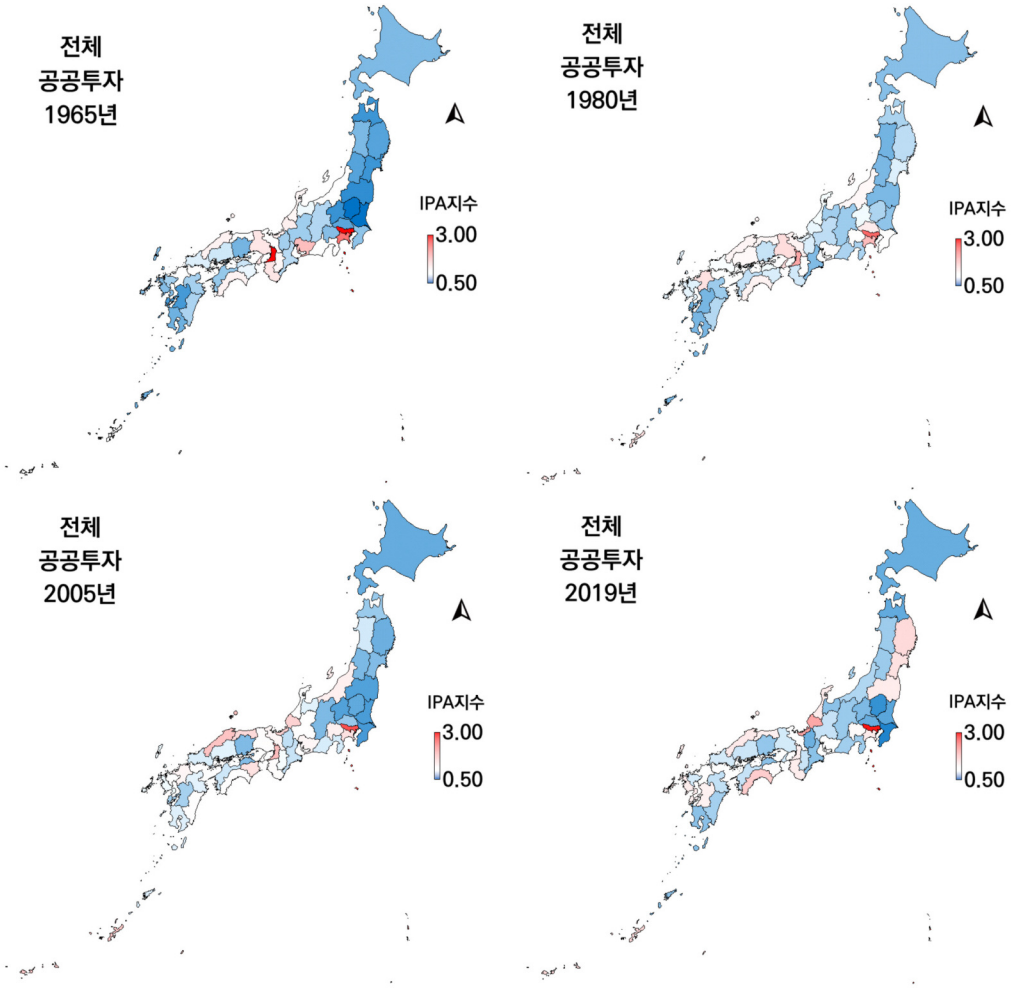

그림 1. 전체 공공투자 IPA지수 변화

로벌한 경쟁력을 지닌 특정 지역으로서의 도쿄도에 대한 공간적 선택성의 강화로 해석할 수 있으며, Brenner가 제시한 신자유주의적 공간전략으로서의 도시 입지 정책의 도쿄도에 대한 적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川上征雄, 2023; 小田清, 2007; 瀬田史彦, 2021; 中澤秀雄, 2019)가 주장하였던 일본 국토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부합한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전체 공공투자의 분포에서 확인된 것이며, 실제로 어떠한 사업이 도쿄도 중심의 공간적 선택성을 강화하고, 반대로 어떠한 사업이 지방권 지향을 유지하는지는 사업별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업별 분포 차이를 통하여 신자유주의적 공간전략과 공간적 케인스주의의 병존 양상을 보다 직접적으로 검토한다.

2) 지방권 지향 공공투자

농림수산 사업 및 국토기반 사업은 지방권을 중심으로 높은 IPA지수를 기록하였다. 그림 2에 나타난 것처럼 농림수산 사업은 1962년부터 2019년까지 도쿄도나 오사카부, 아이치현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에서 일관적으로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낮은 수준의 IPA지수를 기록하였다. 반면 규슈 지방이나 주고쿠(中国) 지방, 시코쿠 지방, 도호쿠 지방에서는 대체로 전국 평균치 이상이나 전국 평균치에 근접한 IPA지수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공간적 선택성을 볼 때, 농림수산 사업은 전형적인 지방형 공공투자의 유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농림수산 사업의 이러한 지방권 지향 분포는, 2000년대 이후 도쿄도 중심의 공간적 선택성이 강화되었다는 서술과 병치될 때, 국토정책이 단일한 선택적 집중 원리로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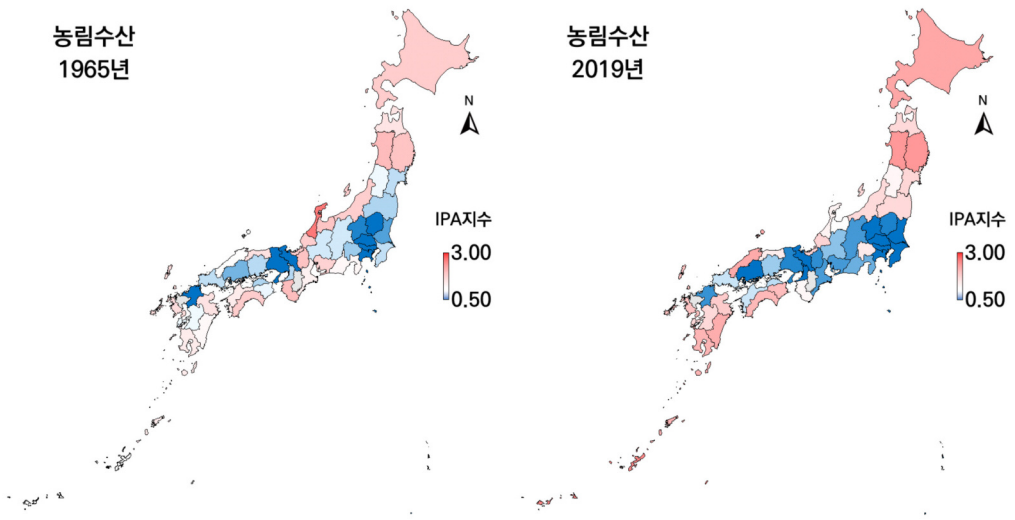

그림 2. 농림수산 사업 IPA지수 변화

만 재편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치산치수와 해안보전, 재해복구 사업으로 구성된 국토기반 사업 역시 1962년 이후 태평양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IPA지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지역을 제외한 지방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IPA지수를 보였다는 점에서 국토기반 사업도 농림수산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방권을 지향하여 공공투자가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국토기반 사업의 경우 사업 성격상 지진이나 수해 등 대규모 자연재해의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공공투자가 집중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예컨대 그림 3의 국토기반 사업(2019년)에서 이와테현(岩手県)이나 미야기현(宮城県), 후쿠시마현(福島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IPA지수가 기록된 것은 2011년에 도호쿠 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부흥 사업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농림수산 사업 및 국토기반 사업은 지방권을 중심으로 수행된 전형적인 공공투자로 평가할 수 있다.

3) 다극형에서 일극형으로 변화한 공공투자

도시기능 사업은 다극형에서 일극형으로 변화한 공공투자의 전형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1965년 시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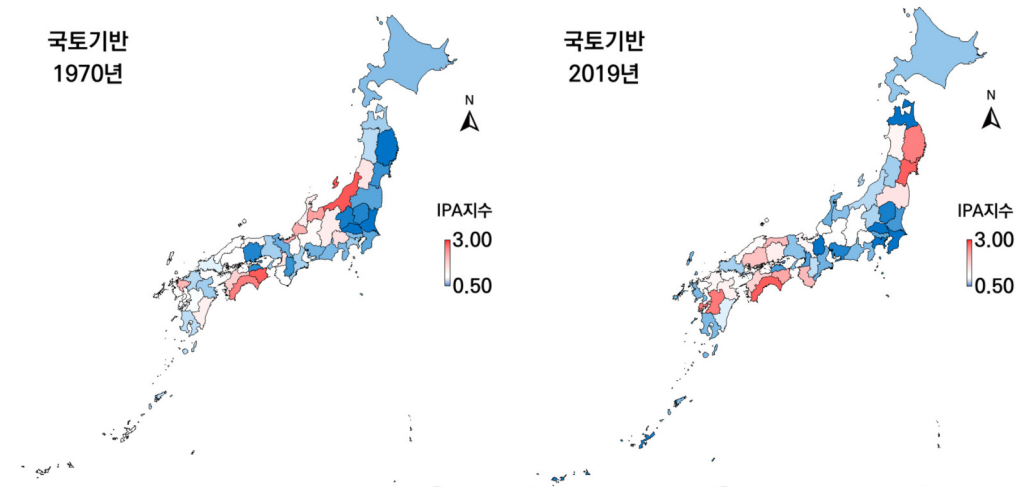

그림 3. 국토기반 사업 IPA지수 변화

www.kci.go.kr

서는 도쿄도의 6.49을 비롯하여 오사카부가 5.37, 가나가와현이 3.18, 아이치현이 2.05를 기록하는 등 3대 도시권에 위치한 도도부현을 중심으로 상당히 높은 IPA지수를 기록한 반면, 기타 지방권의 평균 IPA지수는 0.69에 머물렀다. 이러한 흐름은 1970년대 중엽까지 이어졌으나, 전체 공공투자의 IPA지수를 통하여 확인한 것처럼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걸쳐 전총계획의 영향이 드러나면서 대도시들과 기타 지역과의 격차가 축소되었다. 도쿄도 도시기능 사업의 IPA지수도 1978년에는 3.49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오사카부도 3.13으로 축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도시기능 사업에서도 전반기에는 격차 축소를 지향한 분산 경향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도시기능이라는 영역에서도 전총계획의 균형발전 기조가 일정 부분 작동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2000년대 이전에는 다극형 양상으로 보였던 도시기능 사업도 2000년대에 들어 도쿄도에 대한 공간적 선택성을 강하게 보이기 시작하였다. 도쿄도 도시기능 사업의 IPA지수는 1990년대까지 평균 5.68을 기록하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5.51을 기록하면서 수치상으로는 축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IPA지수에 주목하면, 1990년대까지 평균 3.48의 IPA지수를 유지하였던 오사카부는 2000년대 이후 2.38까지 평균치가 하락하였다. 또한 가나가와현도 같은 시기에 2.70에서 2.13으로 하락하면서 도시기능 사업에서의 도쿄도에 대한 공간적 선택성이 2000년대에 들어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즉 2000년대 이후의 변화는 도쿄도의 절대 수준만으로 설명되기보다는 오사카부나 가나가와현 등 기존 대도시들의 상대적 하락과 결합하여 도쿄 일극화라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정책기조가 특정 도시 및 지역에 대한 공간적 선택성의 강화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다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는 선행연구가 지적한 일본 국토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정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문화교육시설 사업 및 후생복지 사업은 1962년 이후 2대 도시인 도쿄도 및 오사카부에서 높은 수준의 IPA지수를 기록하면서 공공투자가 두 개의 극을 중심으로 공간적 선택성을 보였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이후 도쿄도와 오사카부의 IPA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축소되었다. 예컨대 후생복지 사업의 경우 도쿄도는 1971년에 4.27을, 오사카부도 1975년에 3.23을 기록하였으나, 1980년의 도쿄도의 IPA지수는 1.53, 오사카부도 1.24까지 큰 폭의 축소를 보였다. 문화교육시설 사업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1974년에 도쿄도는 3.66, 오사카부는 4.03이라는 높은 값을 보였으나, 1979년의 도쿄도의 IPA지수는 1.71, 오사카부는 1982년에 1.94로 축소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의 상황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1980년을 계기로 도쿄도의 문화교육시설 사업 및 후생복지 사업 IPA지수는 재차 상승세를 보였으나 오사카부는 오히려 다른 지역과 근접한 위치에 놓여졌다. 도쿄도의 경우 1990년에 3.71을 기록한 이후 2019년에 5.70이라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IPA지수를 기록하면서 이 기간에는 평균 2.88이라는 높은 수준의 IPA지수를 유지하였으나, 오사카부의 경우 평균 1.67을 기록하였다. 1970년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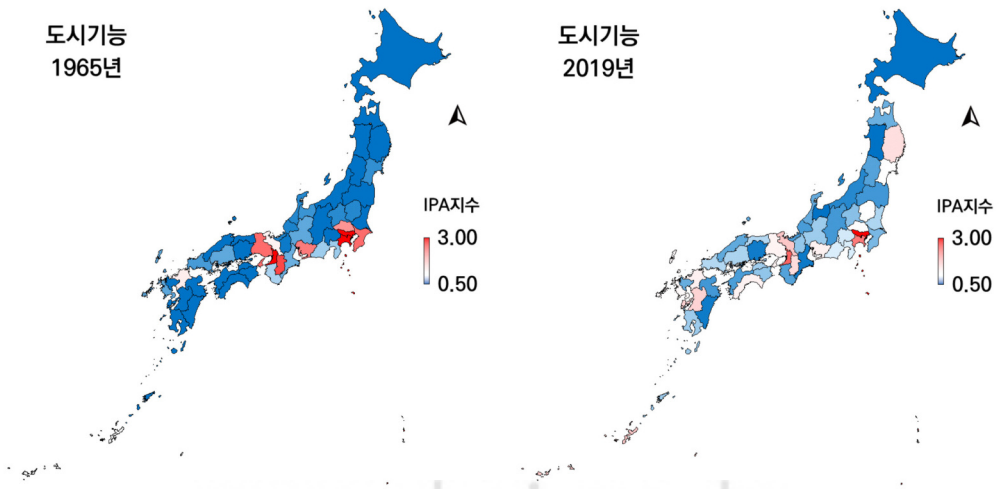

그림 4. 도시기능 사업 IPA지수 변화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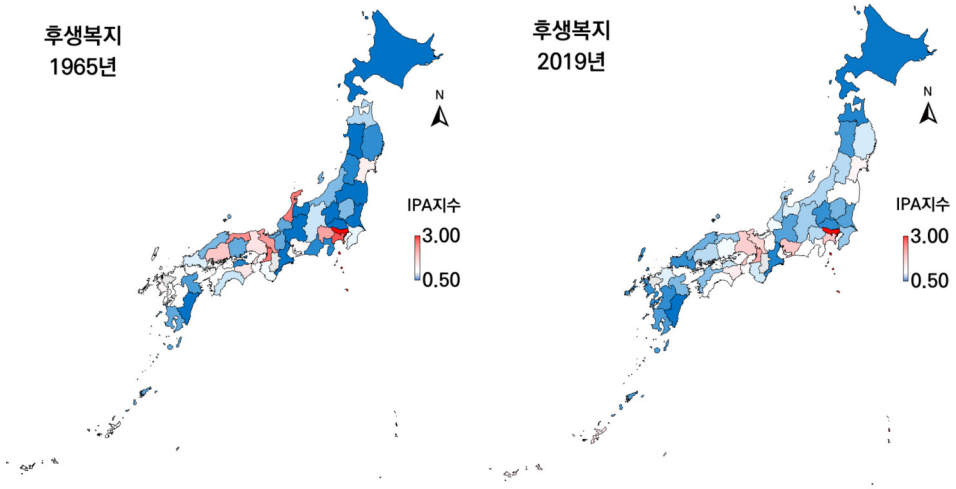

그림 5. 후생복지 사업 IPA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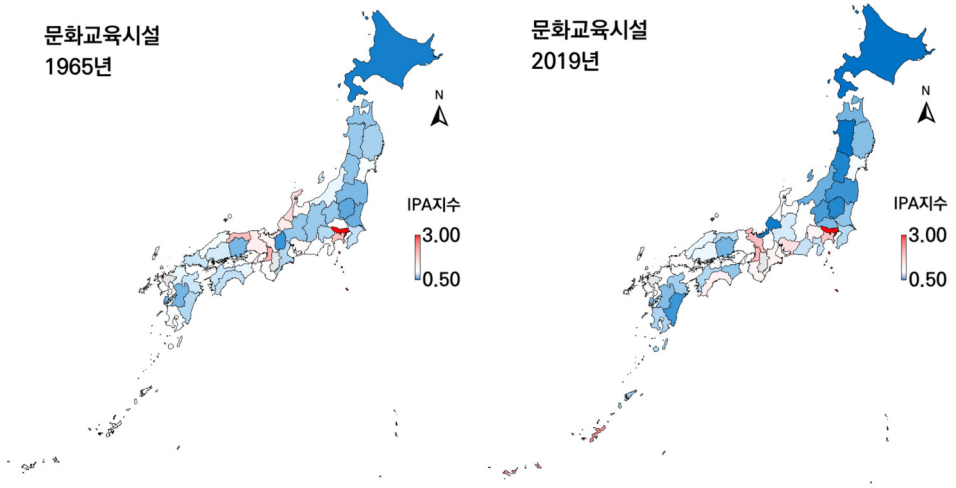

그림 6. 문화교육시설 사업 IPA지수 변화

터 1980년대에 걸쳐 평균 2.65의 IPA지수를 기록한 오사카였으나 도쿄도와 같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였다.

이처럼 후생복지 및 문화교육시설 사업은 1970년대까지는 도쿄도와 오사카부라는 2대 도시에 대한 양극적인 양상으로 공공투자가 투입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오사카부의 하락세가 여실히 드러난 결과 도쿄 일극형으로 전환되었다. 즉, 도쿄도에 대한 두 개 사업의 공간적 선택성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기반 정비형 공공투자

광역 교통기반 사업은 1962년 이후 2019년까지 항만법상의 국제전략항만(国際戦略港湾) 등 국제적 항만 및 도쿄국제공항이나 나리타국제공항 등 국제공항이 입지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대규모 공항의 입지가 어렵고 지리적으로 항만의 입지가 불가능한 내륙부에서는 높은 수준의 IPA지수가 나오기 어렵다. 한편 국제공항이나 국제항만의 정비가 진행될 기회가 많은 대도시 등 지역에서는 특정 시기에 따라 높은 수준의 IPA지수를 기록하게 되는데, 1960년대에 오사카국제공항 정비가 진행되면서 이 시기에 평균 3.0 이상의 IPA지수를 기록한 오사카부 등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한편 도쿄도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의 공공투자가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까지는 평균 IPA지수가 2.25로 나타났는데, 지속적으로 국

www.krih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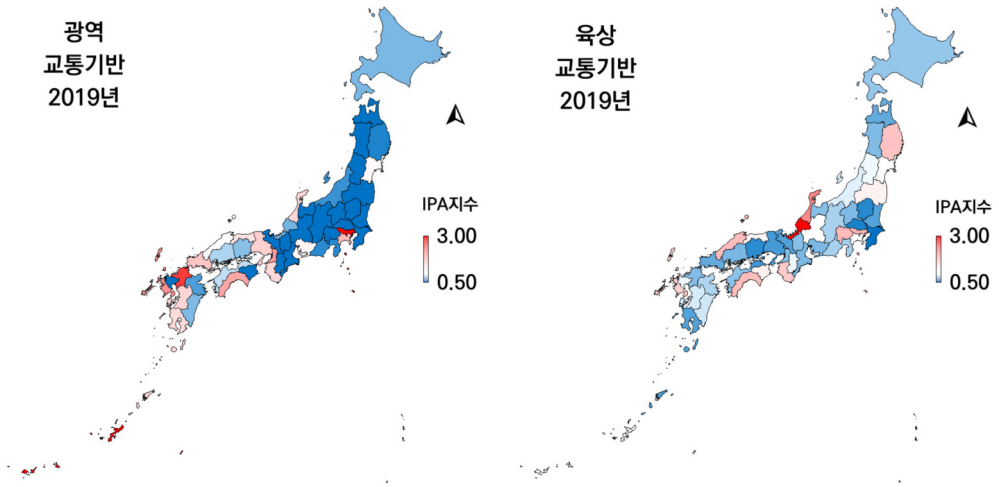

그림 7. 광역 교통기반 및 육상 교통기반 사업 IPA지수(2019년)

제공항 및 국제항만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오키나와현(沖縄県)을 제외하면 이 시기에 도쿄도를 상회하는 도도부현은 전무하다. 2000년대에는 도쿄도의 광역 교통기반 사업의 IPA지수가 평균 4.74로 나타났는데, 도쿄도의 광역적, 국제적 허브화를 위한 투자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도시기능·후생복지·문화교육시설에서 관찰된 도쿄도에 대한 공간적 선택성과 마찬가지로, 도쿄도를 국제적 허브로 재편하는 방향에서 공공투자가 선택적으로 결집된 양상을 보여주며, 신자유주의적 공간전략의 핵심 구성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

육상 교통기반 사업의 경우, 1962년부터 현재까지의 IPA지수 평균치가 2.00을 초월하는 도도부현이 도쿄도 밖에 없으나, 도쿄도도 2000년대 이후의 IPA지수 평균치가 1.71로 머물렀으며, 국민들의 생활기반이라는 차원에서 공공투자가 균형적으로 투입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그림 7을 보면 도호쿠 지방의 태평양 연안 지역이나 후쿠이현(福井県) 및 이시카와현(石川県)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IPA지수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도로망 정비나 후쿠이현 및 이시카와현을 통과하는 호쿠리쿠(北陸) 신칸센 정비의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기반 정비형 공공투자의 공간적 선택성은 주로 인프라 정비를 요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글로벌화의 전개 속에서 서구의 케인스주의 복지국가들이 공간적 케인스주의로부터 신자유주의적 공간전략으로 전환한 것처럼, 일본 국토정책 역시 토건국가에 의거한 국토균형발전 기조를 벗어나 도시와 지역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간주하는 신자유주의적 공간전략으로 전환하였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62년부터 2019년까지의 도도부현별 행정투자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공공투자액을 인구와 면적으로 보정한 뒤 전국 평균 1.00이 되도록 조정한 IPA지수를 산출하고, 공공투자 전체와 7개 사업을 대상으로 일본 국토정책의 기조 전환과 공간적 선택성의 변화를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정성적 연구에 국한되어 온 기존 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투자라는 국토정책 수행 결과를 IPA지수로 지수화하여 정책기조 전환과 공간적 선택성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공공투자의 IPA지수를 통하여 확인한 것처럼 제1차 이후 제4차 전총계획에 이르는 시기에는 도쿄도와 오사카부, 아이치현 등 대도시권에서 높은 IPA지수를 기록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까지 지방권의 IPA지수가 점차 상승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축소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국토라는 공간적 스케일을 전제로 한 국토균형발전 지향의 국토정책이 일본식 공간적 케인스주의로 실천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제5차 전총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0년대 이후 도쿄도의 IPA지수만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오사카부와 아이치현을 비롯한 기타 도도부현의 IPA지수는 전국 평균치 수준으로 수렴하면서 도쿄도에 대한 공공투자의 공간적 선

www.kci.go.kr

택성이 여실히 강화되었다. 이는 글로벌한 경쟁력을 지닌 특정 지역으로서의 도쿄도에 대한 도시 입지 정책의 적용이라는 선행연구의 지적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둘째, 농림수산 사업과 국토기반 사업은 분석 기간 전체에 걸쳐 도쿄도와 오사카부, 아이치현 등 대도시권에서는 낮은 수준의 IPA지수를, 규슈·주고쿠·시코쿠·도호쿠 지방 등 지방권에서는 전국 평균치 이상 또는 전국 평균치에 근접한 IPA지수를 기록하였다. 특히 국토기반 사업의 경우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등에서 높은 IPA지수가 나타난 것처럼, 대규모 자연재해 피해 지역에 대한 재해복구 사업이 공간적 선택성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림수산 사업과 국토기반 사업이 지방권을 중심으로 수행된 전형적인 지방권 지향 공공투자임을 의미하며, 신자유주의적 공간전략이 대두한 이후에도 일정 범위에서 공간적 케인스주의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도시기능 사업과 후생복지, 문화교육시설 사업은 다극형에서 일극형으로 변화한 공공투자의 전형적인 사례로 나타났다. 도시기능 사업은 1960년대에는 도쿄도와 오사카부, 가나가와현, 아이치현 등 3대 도시권에서 매우 높은 IPA지수를 기록하면서 기타 지역과의 격차가 컸으나,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걸쳐 전총계획의 영향으로 격차가 축소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오사카부와 가나가와현 등의 IPA지수가 하락한 반면, 도쿄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도쿄도에 대한 공간적 선택성이 강화되었다. 후생복지 사업과 문화교육시설 사업도 1970년대까지는 도쿄도와 오사카부라는 2대 도시를 중심으로 양극적인 공공투자 구조를 보였으나, 1980년대 이후 도쿄도의 IPA지수만이 재차 상승하고,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도쿄 일극형 구조로 전환되었다. 이는 후생복지, 문화교육시설, 도시기능 사업 전반에서 도쿄도의 글로벌한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공간전략이 뚜렷하게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

넷째, 광역 교통기반 사업과 육상 교통기반 사업은 기반 정비형 공공투자의 성격을 선명하게 나타냈다. 광역 교통기반 사업은 국제전략항만과 국제공항이 입지한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IPA지수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도쿄도는 2000년대 이후 평균 IPA지수가 크게 상승하여 광역적·국제적 허브화를 위한 공공투자가 집중되었다. 한편 육상 교통기반 사업은 도쿄도의 IPA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전반적으로는 국민의 생활 기반이라는 성격에 걸맞게 균형적인 공공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과 호쿠리쿠 신칸센 정비가 진행된 후쿠이현 및 이시카와현 등에서 일시적으로 높은 IPA지수가 관찰된 것은, 재해복구와 신규 인프라 정비가 기반 정비형 공공투자의 공간적 선택성을 형성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일본의 국토정책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토건국가에 입각한 국토균형발전 지향의 일본식 공간적 케인스주의가 지배적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도쿄도에 대한 공공투자의 공간적 선택성이 강화되면서 도시 입지 정책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공간전략이 진행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동시에 농림수산 사업과 국토기반 사업, 육상 교통기반 사업 등 일부 공공투자에서는 지방권 지향 공공투자와 기반 정비형 공공투자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국토정책기조 전환은 토건국가에 의거한 공간적 케인스주의의 완전한 방기가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공공투자와 특정 도시·지역에 대한 공간적 선택성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적 공간전략이 중첩되어 나타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의 정성적 접근에서 주로 논의되어 온 일본 국토정책의 기조 전환을, 공공투자에 대한 시공간적 분석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가시화하고 검증했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국토정책에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 사례가 보여주듯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정책기조가 유지되더라도,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특정 도시 및 지역에 대한 국토정책의 공간적 선택성이 강화될 수 있다. 이는 균형발전과 공간 선택적 집중이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 중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국 국토정책의 정책기조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으로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분석자료가 도도부현 단위의 행정투자 실적액에 한정되어 있어, 각 도도부현 내부의 미시적인 공간구조나 개별 사업의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또한 공공투자라는 국토정책 수행 결과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국토계획이나 법제, 재정제도,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측면과 정책담론의 변화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IPA지수에 의한 시공간적 분석을 토대로, 정책사·제도사 분석과의 결합,

www.kci.go.kr

공공투자 외의 정책 수단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 도쿄도 이외의 도시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가 리스케일링과 신자유주의적 공간전략의 구체적 전개 양상에 대한 심층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후속 연구의 수행을 통하여야 일본 국토정책의 기조 전환을 둘러싼 논의를 더욱 입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註

1) 일본의 행정투자는 한국의 정부(공공부문) 총고정자본형성과 거의 유사하다. 한국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은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수출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총자본형성은 총고정자본형성과 재고증감으로 구성된다. 총고정자본형성은 건설투자, 설비투자, 무형고정투자로 구성되며, 이는 민간과 정부의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 총고정자본형성 중 정부 부문에 의한 투자가 정부 총고정자본형성이며(차성훈, 2010), 대체적으로 일본의 행정투자와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행정투자의 일반사업은 도로, 가로(街路), 도시계획, 항만, 농림수산, 주택, 환경위생, 후생복지, 치산치수, 해안보전, 문교시설(문화교육시설), 실업대책, 재해복구, 관청영선(官庁営繕), 공항, 철도, 기타라는 하위사업으로 구성된다.
3) IPA지수는 도도부현별 인구(P) 및 면적(A)의 제곱근으로 지역별 행정투자액(I)을 나눈 값($\frac{\text{공공투자액}(I)}{\sqrt{\text{인구}(P)} * \sqrt{\text{면적}(A)}}$)을 전국 평균이 1.00이 되도록 조정한 지수이다.
4) 오키나와현 데이터는 수록이 시작된 1973년(오키나와 반환 이듬해)부터 활용하였으며, 1972년 이전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한 지도에서는 오키나와현을 백색(자료 없음)으로 처리하였다.

文獻

차성훈, 2010, "GDP 10% 비중의 중요성, 설비투자!," click 경제교육, 85, 21.

Brenner, N., 2003, 'Glocalization' as a state spatial strategy: Urban entrepreneurialism and the new politics of uneven development in Western Europe, in Peck, J. and Yeung, H. (eds.), *Remaking the Global Economy: Economic-Geographical Perspectives*, Sage, London, 197-215.

Brenner, N., 2004, *New State Spaces: Urban Governance and the Rescaling of Statehood*,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Brenner, N., 2019, *New Urban Spaces: Urban Theory and the Scale Questi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Knox, P. and Pinch, S., 2010, *Urban Social Geography: An Introduction(6th Edition)*, Routledge, New York.

Martin, R. and Sunley, P., 1997, The post-Keynesian state and the space economy, in Lee, R. and Wills, J. (eds.), *Geographies of Economies*, Routledge, London, 865-962.

OECD, 2025, *Redefining Spatial Planning and Development in Israel*,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89036c98-en.

Scott, A. J., 2008, *Social Economy of the Metropolis: Cognitive-Cultural Capitalism and the Global Resurgence of Citie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Swyngedouw, E., 1997, Neither global nor local: 'Glocalization' and the politics in scale, in Coc, K. (ed.), *Space of Globalization*, Guilford Press, New York, 137-166.

Tsukamoto, T., 2012, Neoliberalization of the developmental state: Tokyo's bottom-up politics and state rescaling in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6(1), 71-89. https://doi.org/10.1111/j.1468-2427.2011.01057.x

上野淳子, 2010, "東京都の「世界都市」化戦略と政治改革: 開発主義国家がネオリベラル化するとき," 日本都市社会学会年報, 28, 201-217. https://doi.org/10.5637/jpasurban.2010.201

大田英明, 2021, "新自由主義からの脱却: 日本の長期的成長に向けた処方箋," 立命館国際研究, 33(3), 1-58. https://doi.org/10.34382/00014137

川上征雄, 2023, "国土計画における新自由主義政策の投影," 論壇, 2022(7), 1-12.

小泉允圀, 1978, "行政投資実績かみた投資配分の分析," 都市計画論文集, 13, 139-144. https://doi.org/10.11361/journalcpij.13.139

小田清, 2007, "国土総合開発法の改正と国土計画策定の問題点: 国土形成計画法の制定に関連して," 開発論集, 79, 1-17.

齊藤麻人, 2014, "「リスケーリング論」の射程と都市圏政策," 玉野和志·船津鶴代 編, 東アジアの社会変動と国家のリスケーリング, 独立行政法人日本貿易振興機構アジア経済研究所, 10-17.

ジェラルド·カーティス·石川真澄, 1983, 土建国家ニッポン: 世界の優等生の強みと弱み, 光文社.

瀬田史彦, 2021, "現代の国土政策とネオリベラリズム," 城所哲夫·瀬田史彦 編著, ネオリベラリズム都市と社会格差 – インクルーシブな都市への転

www.kci.go.kr

換をめざして, 東信堂, 22-39.
内閣府政策統括官 編, 2002, 地域経済レポート2001: 公共投資依存からの脱却と雇用の創出, 国立印刷局.
中澤高志, 2020, “地方都市で生業を創る: 大分県佐伯市にみる雇われない働き方の可能性,” 日本労働研究雑誌, 62(5), 67-84.
中澤秀雄, 2019, “「均衡ある発展」という建前の崩壊,” 小熊英二 編著, 平成史完全版, 河出書房新社, 229-286.
中野英夫, 1999, 公共投資支出の経済分析, 三菱経済研究所.
永廣顕, 2014, “土建国家形成期の社会保障,” 井手英策 編, 日本財政の現代史, 有斐閣, 175-196.
日本政策投資銀行, 2007, 第3回北海道経済の構造分析: 行政投資·社会資本.
丹羽崇哲, 2008, RIIM Study Report 1.
丸山真央, 2012, “国家のリスケーリングと都市のガバナンス:「平成の大合併」の地方政治を例に,” 社会学評論, 62(4), 476-488. https://doi.org/10.4057/jsr.62.476
森裕之, 1997, “日本の公共投資の制度的特徴と課題,” 高知論叢, 58, 1-32.
総務省, 都道府県別行政投資実績報告書(1962년~2019년 각년도).
矢田俊文, 1995, “中枢都市広島を考える,” 広島大学経済学部附属地域経済研究センター 編, 第8回研究集会報告書：広島は何をすべきか－次期全総への提言, 地域経済研究推進協議会, 21-34.
矢田俊文, 1996, “アジアの時代における日本の国土政策: 次期全国総合開発計画の策定をめぐって,” 経済地理学年報, 42(4), 256-276. https://doi.org/10.20592/jaeg.42.4_256
矢田俊文, 1999, 21世紀の国土構造と国土政策, 大明堂.
山﨑朗, 1998, 日本の国土開発と地域開発, 東洋経済新報社.
山﨑孝史, 2013, 政治·空間·場所:「政治の地理学」にむけて(改訂版), ナカニシヤ出版.

투 고 일: 2025년 11월 28일
심사완료일: 2025년 12월 16일
투고확정일: 2025년 12월 23일

www.kci.go.kr